

# 민주당 '정권 재창출' 호남 역할 커지나

### 정권 심판론' 민심 되돌리기 중심축 기대 친문 책임론에 호남 정치권 전면 나설 듯 다음주 회동 갖고 성찰·쇄신 결집 논의

4·7 재보궐선거 결과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나자 민주당 텃밭인 호남 민심이 큰 충격에 빠졌다. 정권 재창출에 대한 열망이 높은 만큼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가 차기 대선에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 여당과 야당 후보의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정권 재창출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현 정권과 민주당에 대한 심판론이 위력을 발휘하면서 호남 민심은 차기 대선에까지 이르는 '정권 심판' 민심이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든든한 지지기반 역할을 해오며 정권 재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만큼 이번 민주당의 재보궐선거 완패가 주는 충격은 클 것으로 보인다.

심화하는 불평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실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으로 민심 이반이 크다

는 점에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여권이 패배할 것은 예측됐지만, 너무나 큰 격차로 패배하면서 도무지 믿기 힘들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거대 여당, 특히 친문 진영의 오만과 연일 터져나오는 '내로남불' 식 행태, 문재인 정부의 인적 쇄신 실패 등 현 정부의 무능이 예견된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차기 대선 정국에서 관망세를 보였던 호남 민심이 향후 대선 정국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국적인 민심 이반 속에서 여권의 핵심 기반인 호남에서 정권 재창출론이 분출한다면 '정권 심판론'으로 돌아선 민심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도 호남 민심을 기반 삼아 향후 대선 정국 전면에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당내 정치적 존재감이 크지 않았던 지역 정치권이 결집하면서 여권의 정권 재창출 전면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다음주 회동을 갖고 민주당의 성찰과 쇄신 결집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지역의 비편적 지지뿐만 아니라 서울·부산을 비롯한 전국적인 재·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8일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 결과로 확인된 국민들의 매서운 회초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뼈를 깎는 자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의 위기 상황에서 호남 민심과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향후 대선 정국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 참패는 정권 재창출에 대한 열망이 높은 호남 민심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최원일 기자 cki@kwangju.co.kr

## 이낙연, 대선 불출마 할까 '용광로' 경선 만들까

### 재보선 참패 책임 거취 관심

4·7 재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여권의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거취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오만이 이번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지만 이 위원장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 위원장이 당 대표 재임시 성추문으로 공석이 된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당규까지 바꿔가며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승리, 대선가도에 있어 반등의 계기로 삼으려 했던 이 위원장으로서 최대의 위

기를 맞은 셈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 위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저의 책임이 크다"며 "문재인 정부 첫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와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제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또 "당원과 지지자를 포함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사실상 패배와 책임을 인정했다. 그는 이어 "4·7 재보선으로 표현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저희들이 부족했다.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국민의 삶의 고통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이 위원장은 "저는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미래를 차분히 생각하며, 낮은 곳에

서 국민을 뵈겠다"며 "민주당 또한 반성과 쇄신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일단 정치권의 전망은 엇갈린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의 대선 불출마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지도부가 모두 총사퇴한 상황에서 책임론을 회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한 자릿수 격차거나 집전을 벌였다면 모르지만 패배의 격차가 너무 컸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선 출마를 강행한다고 해도 반등의 기회를 갖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이 위원장을 측면 지원해왔던 친문 진영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 이 위원장 측에서는 '대선 불출마는 너무 성급한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이 이 위원장에게 있기보다는 부동산 정책 실패 등 여권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 위원장이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 대선 가도에 나서 정권 재창출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와 당 대표를 지냈다는 점에서 쉽게 포기하기 보다 위기에 정면으로 도전, 민주당의 '용광로' 대선 경선을 만들어 내는데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 위원장의 대선 경쟁력이 검증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늦어도 이번 주말을 전후해 이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이 위원장의 정치적 투쟁력이 모든 결정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재명 24%  
윤석열 18%  
이낙연 10%

### 4개 기관 대선 적합도 조사

차기 대권 경쟁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위권 경쟁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전국 유권자 1004명에게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를 뽑은 응답이 전체의 24%로 가장 많았다.

이 지사의 지지율은 1주 전 조사와 같은 수치를 유지했다.

반면 윤 전 총장은 18%로 7%포인트 하락, 2위로 내려앉았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4주째 10%에 머물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지사를 뽑은 이가 43%였고, 이 전 대표라는 응답은 23%였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49%의 지지를 받았다.

이번 4개 기관 합동 전국지표조사(NBS)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불공정·성난 부동산 민심 거대 여당에 회초리

### 민주당 재보선 패배 원인

4·7 재보궐선거 결과는 민심의 엄중함을 극명하게 나타냈다는 평가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180석을 몰아줬던 촛불 민심은 불과 1년만에 '민주당 심판'으로 돌아섰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승패 자체를 뛰어넘어 압도적 득표차엔 성난 민심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는 근본적 변화가 없다면 차기 대선도

마찬가지로 경고를 여권에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여권의 참패에는 성난 부동산 민심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압도적 다수의 원내 의석을 앞세워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 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른 사실상의 증세 효과 등이 모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설상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은 대형 악재로 돌출했다. 불로소득의 대명사인 부동산 문제에 분노한 민심을 잡기 위해 여권은 변장을 국토장관 사

의, 국회의원 전수조사, 특검까지 수습 카드를 총동원했지만 들불처럼 번지는 '불공정' 이슈를 진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부동산 정책의 총사령탑이었던 김승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의 행태는 앞치마 덮친 격이었다. 20대와 30대가 국민의힘 지지로 기운 것도 공정과 정의를 갈구하는 민심의 한 단면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민적 피로가 짙게 깔린 것도 여권의 패배 원인이 됐다. 끝

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 이에 따른 불황에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여권에 대한 심판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 여당이 1년 전 총선 압승에 취해 오만에 빠진 것도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친문 강경 지지층과 거여의 의석수만 믿고 설익은 정책들을 밀어붙이며 입법 폭주 등 독선 양상을 보이면서 민심이 등을 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국민 통합보다는 편 가르는 진영 정치도 민심의 심판을 불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선거는 야당의 승리가 아니라 정부 여당의 패배라는 말이 나온다. 정권 심판 여론이 모든 선거 이슈를 압도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고속도로 사고·고장 시 BPR 을 기억하세요!

## B 비상등 » P 피하고 » R 알리기

도로밖 1588-2504

· 당신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